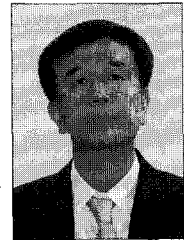


국민과 함께, 국민이 주체가 되는 국민농업 실현 방안



정 기 환 사무총장
국민농업포럼

1. 시작하며 : 21세기 지속 가능한 한국사회, 농업·농촌에서 길을 찾자

지금 세계는 식량 위기, 에너지와 자원의 위기, 생태환경의 위기가 날로 증폭되고 있다.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과 국제 유가의 고공 행진,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의 속출 등이 함께 상승작용을 하여 세계경제와 인류 생존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위기의 원천으로 비판받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부국과 빈국, 중심부와 주변부, 나라 안의 가진 쪽과 그렇지 못한 쪽의 세계적인 사회적 양극화 심화가 우리 삶의 지속 가능성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특히 경제와 인간생활의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각 지역과 사회의 문화와 생활양식, 농업과 환경 등 사회적 공통자본이 파괴되고, 소수의 국내외 자본 중심의 강자 독식형 사회경제 구조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인류와 국민의 생존을 지탱하는 기반인 식량, 에너지·자원, 환경 문제가 지구적

차원에서 위기를 맞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주류 패러다임인 성장 제일주의, 시장 지상주의, 개발주의, 효율주의를 재검토하고, 한 사회와 나라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진지한 국민적 논의와 대안 모색을 해야 할 때이다.

우리 한국사회 역시 이러한 지속 가능성의 위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오늘 우리 국민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양극화로 고통 받고 있다. 더욱이 27%밖에 되지 않는 식량자급도(쌀 제외 5%)와 3%밖에 되지 않는 에너지 자립도, 전국토의 난개발 막개발로 인한 생태환경의 악화는 지구적 규모의 식량·에너지·환경의 위기 시대에 오로지 속수무책일 뿐이다. 이러한 위기를 심화시키는 우리의 사회경제 구조는 사회적 양극화와 동전의 양면 구실을 하여, 절대다수의 사회적 약자에게 그 고통을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 사회의 지속 가능 여부는 무엇보다 농업·농촌의 유지와 발전이 국민경제와 국가사회의 지속 가능한 유지 발전에 필수적인 최소 기본조건(National Minimum Requirement)임을 인

식하느냐 여부에 있다고 본다. 이는 선진 각 국의 자국 농업·농촌 보호 육성에서 확인되는 역사적 사실이며, 선진국 진입의 기본 조건이다. 더욱이 앞서 언급한 식량·에너지와 자원·환경을 통합적으로 갈무리하는 산업이자 공간이 바로 농업·농촌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이들 선진 각국들이 이 세 부문을 통합적으로 지원 육성하는 데서 여실히 증명된다.

그러나 오늘 우리나라 농업·농촌은 위기에 처해 있다. 이는 이 땅을 일구어온 '농부'의 생존 위기이며,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할 국민의 기본권 위기이며, 자연과 조화롭게 공생하며 풍요롭게 살아야 할 인간성의 위기이다. 안전한 먹을거리의 가능한 안정적 자급, 에너지 자원의 가능한 지역 내 자립 순환, 생태환경 친화적 농업·농촌 시스템의 전면적 구축은, 사회와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기본 과제임에도, 성장제일주의, 시장 지상주의, 신개발주의, 효율주의 세력과 정책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이에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의 위기는 바로 우리 사회·나라·인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위기임을 인식하고, 농업·농촌의 다양한 가치를 새롭게 재발견, 국민 모두와 나누는 실천적 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 모두가 당사자 주체가 되어, 국민의 사랑과 참여 속에 농업·농촌이 본연의 다원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인 국민과 생산자인 농민이 이분되어 갈수록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아껴주며 인간답게 사는 생활인'으로서 상생하고 순환하는 도농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농업이란 이와 같은 지향을 통해 국민 모두가 풍요롭고 쾌적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21세기 지속 가능한 한국사회의 길은 농업·농촌에 있다.

2. 지속 가능한 한국사회를 위한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

가. 국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기대와 요구

지속 불가능한 위기에 처한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우리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은 국민이 농업·농촌에 바라는 기대와 요구를 반영하여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농업·농촌의 비전 만들기가라 말할 수 있다.

국민이 농업에 요구하는 것은 첫째, 안전한 먹을거리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국민건강과 식량주권을 수호하고, 둘째, 환경과 농업의 조화에 의한 풍요롭고 쾌적한 농업·농촌의 유지 발전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 발전의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며, 셋째, 남북의 특수한 조건에 비추어 통일에 대비하고 민족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는 남북 농업협력의 확대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수입 농식품의 식탁 지배, 허술한 검역체계, 수확 후 농약 과다사용으로 오염된 수입 농식품 등 식품 안전성의 위기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수입 농식품에 대해 국민의 69%가 불신하고 4%만이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국내 농산물에 대해서는 39%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07. 12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 안전 인지도 조사'). 식품구매 시 가장 고려하는 요소는 '안전성'이 56%로 가장 높았다(가격 19%, 맛 13%, 영양 8%, 포장·외관 4% 순).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강화될 전망이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와 기상재해의 일상화, 농업용수 부족, 도시화·사막화와 경지면적 축소 등으로 세계 식량생산의 정체 내지 감소,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BRICS) 등의

국제곡물 '폭식' ('블랙홀')과 주요 곡물 수출국들의 재해로 인한 작황부진과 이에 따른 수출 제한 조치, 미국·브라질 등 식량·에너지 과소비국들의 잘못된 바이오연료 정책에 의한 식용 곡물의 연료용 전환과 식용 작물 경지면적 축소, 국제곡물 메이저와 GMO 바이오 농화학 메이저들의 결탁에 의한 바이오연료 곡물 재배 확대 등은 식량문제의 불안을 지속적으로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식량위기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요구는 갈수록 높아질 전망이다.

경제적 조건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조건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늘어나고 있다. 특히 양극화 해소와 생활 여건의 개선, 생태환경의 보전 관리, 지역사회(지역경제)의 균형발전과 활성화 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러한 요구는 바로 농업·농촌이 수행하는 다원적 기능의 유지 증진으로 나타난다. 식량안보는 물론, 지역사회(지역경제) 유지 활성화, 일자리 유지와 창출,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 관리, 보건휴양 및 인성 함양의 쾌적한 공간 제공, 전통문화와 역사자원의 계승 발전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의 유지 증진과 생태환경 친화적 농업·농촌 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앞으로 특히 높아질 전망이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농업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높아질 것이다. 앞으로 북미·북일 수교와 동북아 평화 정세의 조성 등에 따라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에 대한 농업의 기여를 바라는 요구가 커질 것이다. 농업협력의 확대 강화를 통한 남북의 상생과, 이를 통한 북의 농업 재건 발전과 남북 합작에 의한 식량위기 공동 해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위와 같은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농업·농촌

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정책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성장제일주의, 시장 지상주의, 신개발주의, 효율주의로는 결코 접근될 수 없으며, 오히려 있는 기능조차 파괴하고 왜곡시킬 것이다. 수입식품에 국민의 먹을거리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고서는 '안전한 먹을거리의 안정적 공급'은 불가능하고, 농업을 성장제일주의와 소수 선별적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축소 포기하고서는 다원적 기능의 유지는 불가능하며,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위기만을 키울 뿐이다. 더욱이 국내 농업의 적정규모가 유지되어야만 국제적인 식량위기 시대에 남북 공동의 식량문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고, 강대국의 존형 평화가 아니라 남북 상생의 농업(경제)공동체 실현에 의한 자주적 평화 정착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나.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

위와 같은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하는 우리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을 정리하면, 첫째,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국민건강과 식량주권 수호 역할, 둘째,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의 토대가 되는 다원적 기능의 역할, 셋째, 농업협력을 통해 남북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여 상생 평화의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역할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농업을 실현함에 있어서 이러한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을 국민이 올바로 인식하고 농업·농촌 살리기에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농업·농촌에 대한 관점을 다시금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몇 가지 관점을 함께 생각해 보자.

첫째, 농업·농촌은 국민경제와 국가사회의 지속 가능한 유지 발전에 필수적인 최소 기본조건(National Minimum Requirement)이라는 점이다. 농업·농촌을 물론 하나의 산업 부문으

로 인식하여 그 자체의 온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이겠으나, 이와 같은 부분적 시각에서 나아가 국민경제와 국가사회의 전체적 시각에서 기본적으로 국방·국토·자연·교육·사회간접자본 등과 같이 국가 유지의 기간적 필수조건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농민과 도시민, 농업과 공업(및 서비스업), 농촌과 도시가 국민경제(국가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상호 보완 관계에 있으며 동반성장해야 하고, 이에 농업·농촌의 보호와 활성화 정책이 국가발전의 기본전략임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우리 농업·농민의 비중은 낮아지나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보면 그 중요성은 갈수록 증대하며, 이러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우리 농업의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부가가치 생산의 비중이 2.4%이며, 총인구 대비 농가인구의 비중이 6%로 낮다. 앞으로도 그 비중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더욱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현재 그리고 미래의 국민생활 차원에서 보면,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와 역할에 대한 요구와 기대는 더욱 커져가고 있다. 우리 사회의 건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그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농업·농촌은 그동안 전통적으로 기능해온 단순한 식량 공급 기지에서 나아가 안전·안심의 고품질 식료 공급,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 유지 활성화, 국토 및 자연 환경 보전, 보건·휴양과 인성 함양의 공간 제공, 전통·역사·문화 자원의 계승 보전 등, 그 다원적 기능의 충분한 발휘를 요구받고 있다. 특히 국민 전체 차원에서 앞으로 농촌은 농민에게는 물론 국민 일반에게도 정주공간이자 경제활동공간이며 경관공간이자 문화교육 및 레저휴양의 공간으로 기능해 갈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 농업·농촌은 가장 중요한 사회적 공통

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SOC)이다. 사회적 공통자본이란, 한 국가 내지 특정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풍족한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우수한 문화를 전개하며, 인간적으로 매력적인 사회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장치를 말한다. 사회적 공통자본은 자연환경, 사회적 인프라, 제도자본 등 세 가지의 큰 범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대기·삼림·하천·물·토양 등의 자연환경, 도로·교통기관·상하수도·전력·가스 등의 사회적 인프라, 그리고 교육·의료·사법·금융제도 등의 제도자본이 사회적 공통자본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농업·농촌이야말로 다양한 사회적 공통자본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회적 공통자본을 보전 공급하고 있다고 하겠다.

넷째, 21세기 한국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는 다음과 같은 농업·농촌의 비전을 요구하며, 이러한 농업·농촌의 비전을 현실화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와 나라의 미래는 지속 불가능하다. 첫째,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국민 식생활의 유지 향상에 기여, 둘째, 활력 있고 매력적인 지역 만들기에 의한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 셋째, 국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풍요로운 자연 및 국토환경의 보전 관리에 기여, 넷째, 21세기 창조적이고 풍요로운 삶의 생활공간으로서 기여, 다섯째, 고령화 사회의 건강한 노후인생과 자기실현의 장으로서 기여, 여섯째, 생태적 감수성과 협동적 문화를 체화하는 창의적 자립적 인재의 양성 공간으로서 기여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크게 보아 이 여섯 가지 측면에서 비전을 갖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 농업·농촌은 그 어느 산업·공간보다 미래가치가 밝으며, 그런 측면에서 농업·농촌의 이러한 비전들의 현실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에 관한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조직해내야 할 책무가 농업·농촌을 생각하는 이들과 농민진영에게 시급히, 그리고 전면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3. 국민이 주체가 되는 지속 가능한 국민농업의 실현

가. 국민농업의 중요성과 추진 주체

왜 '국민농업'인가.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왜 '지속 가능한 한국사회'를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국민농업'이 필수 조건임을 주장하는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21세기는 식량의 세기, 에너지와 자원의 세기, 생태환경의 세기이다. 식량·에너지 자원·생태환경의 위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오늘, 우리 사회는 무엇으로 이에 대처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천정부지로 뛰는 국제 곡물 가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2007년, 2008년 겪었던 국제곡물가 상승의 여파로 전 세계 기아인구가 2008년 8억5천만 명에서 금년 들어 10억2천5백만으로 급증하였다. 올해에도 러시아 등의 밀 작황저조로 국제 곡물가격이 크게 뛰고 있다. 이 같은 가격 상승은 유가 상승에 덧붙여 대체용 바이오연료 생산이 늘어나고 개도국의 육류 소비 증가(사료용 곡물 소비 증가)에다 기상이변에 따른 흉년이 겹쳤기 때문이며, 더욱이 국제해상운임 상승과 중국, 러시아, 아르헨티나가 단행한 수출 곡물에 대한 수출세 부과도 사태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 국제시장에선 곡물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곡물메이저(및 바이오 농화학 메이저)들의 세계 농업 지배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겨우 27%(쌀 제외 5%)에다 쌀 다음 국민의 제2주식이 되어버린 밀 자급률은 1% 미만에 불과하다. 정부에서는 해외 농장 개발, 안정적 곡물수입 선 확보, 곡물 수입

비축물량 확보 등에서 방안을 찾고 있다. 지금까지 어느 정부에서도 가능한 국내 자급력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은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는다. '곡물은 얼마든지 수입해 올 수 있다'는 '비교우위 개방 농정론자'들이 식량대란의 위기 뒤에서 국민의 생명줄을 죄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식량문제만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제 유가의 고공 행진으로 2008년 배럴당 140달러까지 치솟았던 석유가격으로 인해 이미 세계는 석유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에너지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한다. 환경 파괴와 비효율적인 핵과 화석에너지 집중체제로는 에너지 위기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태양광(태양열), 풍력, 조력, 수력, 지열, 바이오가스 등 재생가능 에너지 자립 순환에 전격하고, 특히 중앙 집중의 에너지 독재체제를 지역순환 지역자립의 분산형 에너지 체제로 하루빨리 전환해야만 한다. 종자, 비료, 농약, 비닐, 농기계, 연료, 사료, 포장, 저장, 수송 등 모든 농사 과정을 석유 자원을 비롯한 초국적 자본에 의존하는 공장형 농축산업의 생태환경 친화적 지역순환·지역자립 농업체제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농촌지역에서 특히 햇빛(태양열), 풍력, 조력, 수력, 지열, 바이오가스 등 재생가능 에너지를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만이 아니라 도농 상생의 녹색 교류운동의 주요 과제로도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식량위기와 에너지 위기의 시대에 식량주권과 에너지 주권을 실현하는 것, 그리고 먹을거리 오염과 생태환경 위기의 시대에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가능한 자급하며, 생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길이며, '지속 가능한 국민농업'의 길이다.

농업·농촌이 지금과 같은 추세로 해체되고 붕괴된다면, 식량안보에 대한 위협은 물론 다원적 기능의 상실로 말미암은 국민적 피해와 부담은 실로 막대할 것이다. 농업·농촌 문제는 바로 도시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면 도시에서의 사회적 비용이 농촌 거주 시 비용보다 무려 17배나 더 필요하다는 조사도 있다. 농촌에 적정 인구가 농업이나 농업관련 산업에 종사하면서 도시 부럽지 않게 살 수 있어야만, 도시 과밀화로 인한 도시문제(주거 밀집과 집값 상승, 쓰레기, 교육, 교통, 환경 등 사회적 비용 과다)를 억제 해소해나갈 수 있고, 농촌지역사회 고용 유지와 새로운 창출을 통해 고용 없는 왜곡된 성장과 저성장체제 고착화 속에 악화일로에 있는 실업문제를 억제 해소해나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농촌과 도시는 상생하고 순환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또한 식품 안전문제로 인한 아이들의 아토피와 소위 성인병으로 불리는 비만, 당뇨 등 '생활습관 병'으로 인한 국민 건강에 대한 위협도 생태환경 친화적 지속 가능한 농업을 통해서만 궁극적으로 해결 가능하며, 아이들의 문화적·생태적 감수성을 키우는 인성 교육 또한 농업·농촌을 통해서만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 21세기 다음세대의 경쟁력은 문화적·생태적 감수성과 그 창의성에 좌우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자연과 교감하고 생명 친화적, 녹색 친화적 경험과 학습을 하는 아이들의 성장만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도 농촌과 도시가 상생 순환해야만 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있다.

그리고 2025년에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다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 문제 또한 농업·농촌의 활성화 속에 해결될 수 있다. 건강한 노후 생활과 자기실현의 장으로서 농업·농촌의 역할이 그것이다. 도시생태농업의 활성화도 그 중요한

해결책이며, '3도4촌(4도3촌, 5도2촌)의 전원 농업(혹은 생계형, 취미형 등)도 방법이다.

왜 '국민농업'이며, '지속 가능한 국민농업'인가. 농업·농촌문제나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이 국민 전체의 생활과 미래에 필수불가결한 최저한의 기본조건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농업·농민의 문제가 농민만의 힘으로 해결되기에는 농민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는 소극적 측면에서 나아가, 오늘 국민 생활 전반의 위기가 바로 농업·농촌 문제 해결 없이는, 농촌·농민과 도시·소비자가 상생 협력하지 않고는 해결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농민의 경우에 서서 보더라도 '지속 가능한 국민농업'은 핵심 의제이다. 농업·농촌 문제의 해결을 정부에서 구하는 것은 중요하다. 정부 정책이 바로서고 또 그러한 바른 정책을 펴는 정부가 들어서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과제이다. 그러나 그 과제도 대다수 국민이 농업·농민의 존폐에 절실한 이해관계를 느끼게 하는 노력이 일상적으로 기울여질 때 가능하다. 일상적 지속적으로 국민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며 동의를 구할 때, 즉 국민을 움직여야 정부가 움직인다. 특히 식품안전성의 위기와 생태환경의 위기 시대에는, 생태환경 친화적인 지속 가능한 농업의 실천을 통해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고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 증진하는데 적극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농민의 노력에 대해서 국민은 당연히 정당한 평가와 사회적 보상을 통해 농민의 인간다운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

국민경제에서나 농촌지역에서 농업·농민의 비중 저하로 농민이 사회적 소수자로 되고 있기 때문에 소수자로서의 농민이 존립하기 위해서는 다수자인 비농업 일반 국민의 지지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09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보면 도시민

89.3%가 국가경제에서 앞으로도 농업이 중요하다고 지지하고, 현재와 미래의 농업·농촌의 역할로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으며, 도시민 응답자의 58.6%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인정하고, 다원적 기능유지를 위한 세금 추가부담에도 50.3%가 찬성하였다. 또한 도시민 83.8%는 국산농산물이 중국산이나 개도국 농산물과 비교해 훨씬 안전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국민의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지지여론이 우세하므로 앞으로 여론의 유동적 특성을 고려할 때, 더욱 적극적인 국민 설득과 국민들의 애정을 조직화하는 작업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국민농업'은 바로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이 주체가 되는 농업'으로서, '도농 상생의 농업'이며, '지속 가능한 한국사회(지속 가능한 국민 생활)'을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을 말한다.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 증진하며, 농민의 인간다운 생활권을 보장하는 것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 주체가 되어 실현하는 지속 가능한 국민농업'이다.

나. 국민농업의 목표와 추진전략

1) 목표

국민농업은 소비자 국민과 생산자 농민의 이해관계를 생산자와 소비자로 분리시키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아끼는, 함께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생활자'로서, 국민 전체가 직접 농업의 이해 당사자가 되도록 한다. 이로써 국민 일반과 농민이 공동체의 성원으로 이해관계를 공유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농업·농민이 먹을거리라는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생산자에 그치지 않고, 식량 및 에너지 주권과 다원적 기능의 발휘,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유지 활성화, 먹을거리 안전과 국민 건강권의 실현

등, 국민 일반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일치하게 만드는 국민경제·국가사회의 뿌리로 그 지위를 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과 중요성을 갖는 국민농업의 목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민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활권의 보장이다. 대한민국 헌법 10조(행복 추구권), 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기초하여 농민은 도시민 못지않은 경제적 소득뿐만 아니라 복지 서비스, 보건의료, 주거, 교육, 문화 등 인간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것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농민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활권의 보장은 '농부의 지속 가능성 보장'을 말하며, 농부의 지속 가능성 보장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농업'의 기본조건이다. 국민농업의 첫 번째 목표이다.

둘째,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기본권의 보장이다.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소비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먹을거리 기본권)에 속하고, 국가는 그것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먼저 안전한 먹을거리의 보장은 무엇보다 국내 먹을거리 자급력 제고에 의해 추구되어야 하며, 그것은 식량주권 실현이다. 다음으로 안전한 먹을거리의 보장은 생태환경 친화적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실현된다. 먹을거리와 에너지 자원과 생태환경의 위기에 대처하는 국민농업의 두 번째 목표이다.

셋째, 도농 상생과 순환의 공동체 건설이다. 인간답게 살맛나는 농촌, 농민의 생활권 보장과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도, 도시 생활자와 농촌 생활자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아끼는, 함께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생활자로서, 도시와 농촌의 상생과 순환, 농민끼리 서로 협동하는 농민 상생, 경제활동의 성과가 지역 내에 귀속되는 경제 순환,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자연 순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생과 순환의 공동체 건설이야말로

로 도시와 농촌, 일반 국민과 농민이 함께 사는 '21세기 한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본 조건으로서, 국민농업의 세 번째 목표이다.

2) 추진전략

지속가능한 국민농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의 첫째는 **농정 패러다임의 혁신**이다. 농민·농업·농촌의 희생을 전제로 한 성장제일주의로부터 탈피하고, 농민·농업·농촌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발전 모델을 실천하며, 농민과 국민, 농업과 비농업, 농촌과 도시가 함께 상생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농정 패러다임의 혁신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경쟁력 지상주의와 소수 선별적 규모화·단작화·개별화의 엘리트주의 농정에서 다양한 품목과 업종, 다양한 계층의 농가들을 협동화·조직화·복합화·다각화로 이끄는 상생과 순환의 농정으로 혁신해야 한다. 그래서 농업만이 아니라 농업·식품·환경·지역·문화복지 등을 포괄하는 통합농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추구한다. 이러한 농정 패러다임의 혁신은 무엇보다 농정추진체계의 혁신, 곧 농민과 지역주민의 주체역량 강화에 기초한 지역공동체의 분권과 자치 역량의 강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식량주권 강화 전략이다. 지금까지 식량안보 차원의 수단은 국내 생산(자급), 비축(재고 보유), 수입 안정화이다. 그 중 기본적 수단은 국내 생산, 즉 적정 식량자급률의 유지이다. 자국의 농업 자원을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세계 식량문제 해결에도 공헌하는 길이다. 비축과 수입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식량·에너지·기후변화 등의 문제로 인해 한계가 있다. 식량의 안정 공급을 위해서는 국내 생산을 가능한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 품목별 자급률 목표치를 설정, 국내 생산이 국내 소비에 어느 정도 대응하는지 평가하고, 국가(중앙 각 부처)·지자체·농민·소비자·식품산업 관계

자들의 실천과제를 명확히 하도록 한다. 쌀·우리 밀 소비 촉진, 자연순환형 축산 확대 및 조사료 자급기반 확대(윤작 체계 확립), 식용콩과 우리밀 재배 확대, 국산 농산물과 식품산업 간 연계 촉진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의 확충 전략이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직불제의 확충과 환경 및 경관 보전, 농촌지역사회의 유지 활성화를 위한 경제활동 다각화, 향토 산업진흥, 도농교류·농촌체험·보건휴양 활성화, 농어촌 복지 기반 확충 등을 추진한다.

넷째, 지역순환형 생명환경농업 체계 구축과 도농 간 생산-유통-소비를 함께 책임지는 먹거리 네트워크 건설이다. 농업과 임업과 축산업의 자원순환과 환경친화적 농법 등의 물질 순환과, 지역 내 생산 지역 내 소비 체계의 구축(지역먹거리살림운동: 로컬푸드 운동)과 지역 내 농업의 복합 산업화(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살린 1·2·3차 산업의 종합 추진)를 통한 경제순환 등 지역순환형 농업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시장유통에 좌우되지 않는, 도시 소비자와 농촌 생산자가 직접 결합하여 생산과 유통, 소비를 함께 책임지는 다양한 먹거리 네트워크를 추진한다.

다. 국민농업 실현을 위한 실천과제

이상과 같은 국민농업의 목표와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과제로는 이미 1980년대 중반 이후 도시민, 즉 일반국민들의 참여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하고 있는 도농생활협동운동과 2000년대 이후 전개해온 학교급식운동, 최근의 슬로푸드운동과 도시농업운동, 식생활교육운동 등에서 그 실천방안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 지역 먹을거리 살림운동

지역먹을거리체계(local food system)는 지역 내에서 생산된 먹을거리를 매개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사회체계를 말한다. 현대 먹을거리체계는 곡물메이저를 비롯한 초국적 농식품기업과 수입산을 전문 취급하는 국내 식품가공 및 유통 자본에 의해 지배되는 원격지(세계) 먹을거리체계이다. 지역먹을거리체계는 이로부터 발생하는 먹을거리와 환경오염, 지역 농업 해체와 농민 이탈 및 하강분해, 생태환경의 파괴, 지역공동체 붕괴와 지역경제 위기 등에 대한 대안으로, 일정 지역 단위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먹을거리를 매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지역순환경제(지역순환농업)이다.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국민농업운동의 실천과제이다. 공공기관(학교, 정부 및 산하기관, 군대, 병원 등)과 사업체 등에서 급식 및 기타 용도로 대량 구입하는 농산물을 가능한 지역 산 구매 제도화, 지역 내 보건복지용 먹을거리의 지역 산 구매 의무화, 지역먹을거리를 사용하는 식품제조 및 유통업체에 대한 세계 금융 및 행정적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한다.

2) 식생활 교육 국민운동의 전개

우리 농업의 미래는 자라나는 다음세대의 식습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에게 건전한 식생활과 우리 음식문화 식습관을 체득하게 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며, 농업·농촌에 대한 체험활동과 자연학습의 기회를 정규 수업일수로 갖도록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국민농업을 실현하는 기본조건이라 하겠다. 다행히 민간진영의 노력으로 지난해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생활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매 5년마다 점검 및 평가를 하게 되어있다. 지난 4월 수립하여 현재 시행중인 국가식생활교육기본계

획은 식생활교육의 3대 핵심 가치를 환경·건강·배려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법률의 제정과 시행만으로 목적인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바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실천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때 비로소 목적인 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3) 도농 교류협력에 의한 농촌형 햇빛발전소 건립운동 등 지역에너지자립운동(local energy system)

식량·에너지·환경 위기의 시대에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을 최대한 발휘시키는 것만큼 효과적인 대응책도 없다. 화석에너지 종속형 관행농법에서 탈피, 지역순환형 생명환경농업을 실천하는 것도 최선의 지역에너지 자립운동이며, 나아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수력, 조력, 바이오가스 등을 적극 활용하는 농촌형 에너지 전환운동 또한 국민농업운동의 중요한 실천과제이다. 이를 위해 농가나 마을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 정책 지원 촉구와 1사1촌 결연운동의 주요 과제화, 도시 소비자와 농촌 생산자간 도농 녹색교류운동의 주요 과제화를 추진한다. 현실적으로 가장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햇빛(태양광)발전소 건설운동이다. 이 운동은 에너지 위기 시대에 지속 가능한 사회와 농업을 위한 에너지주권운동으로서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국민농업운동의 주요과제이다.

4) 도시생태농업운동의 추진

도시생태농업은 가정의 화분농사, 담벼락농사, 옥상 텃밭농사, 도시 유휴지 농사, 도심 주말농장, 공원의 농장화, 학교 생태학습지, 병원의 원예치료지 등 모든 가능한 형태로 도시 지역주민들이 '지역 내 생산 지역 내 소비'의 순환구조를 통해 모두가 생산자이자 소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국민농업운동의 하나이다. 특히 지역 내 고

령층과 여성,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생태적 농법으로 경작되는 도시농업을 통해 안전한 우리 먹을거리와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인성을 함양할 수 있다. 이미 유럽(독일의 클라인가르텐, 영국의 알롯먼트, 네덜란드의 호르크스투인, 러시아의 다차 등), 일본(시민농원), 쿠바, 뉴욕 등지에서 활발히 실천되고 있다. 도시생태운동은 풀뿌리 지역운동 활성화에도 기여하며, 도시내 수자원 및 공기의 순환 촉진, 대기온도 냉각 등 도시환경 개선과 생태도시로의 탈바꿈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특히 이 운동은 도시지역 국민이 소비자인 동시에 (작은 규모로나마)생산자가 되는 새로운 인식과 삶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오는 생생한 체험의 기회가 된다. 따라서 국민이 직접 체험하는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 및 소비과정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국민농업'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 나아가는, '국민농업운동 주체되기' 운동이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와 중앙정부에서는 지원 및 교육훈련 기능을 담당할 '(가칭)도시생태농업지원센터(법)'를 설치,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5) (가칭)국민농업지원센터 건립운동 추진

지속 가능한 국민농업은 국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지속 가능한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한 진정한 국민운동이다. 따라서 국민농업의 목표와 전략을 교육하고 농사 체험학습을 담당하는 '국민농업회관'과 '국민농업 실습지', '귀촌·귀농자 지원센터(아울러 위' 도시생태농업지원센터(까지)를 포괄하는 '(가칭)국민농업지원센터'를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 단위에서 설치하도록 한다. 이를 위한 관련 법 제정 및 건립운동을 추진한다. 여기서는 도시 퇴직 노령자들의 농사 훈련과 초·중·고등학생들의 농업 교육 및 체험, 귀촌·귀농 희망자들을 위한 교육 및 실습을 담당할 것이다.

6) 먹을거리 안전 및 원산지 표시 강화를 위한 시민감시운동 추진

수입농산물의 국산 둔갑과 표시 기준 위반 등에 의한 국민의 경제적 손실과 건강권 침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에 관한 행정의 감시 단속도 허술한 편이다. 이에 수입산 먹을거리의 검사·검역체계의 대폭 강화를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조직하고, 표시 기준의 강화운동을 전개한다(예를 들면 유전자조작농산물 표시제 적용 품목의 전면 확대 : 현재 콩·옥수수·콩나물·감자 등 4개 품목 국한. 유전자조작농산물의 비의도적 원료 혼입을 1% 미만으로 강화 : 유럽 수준. 한국은 3% 까지 허용.), 또한 원산지 표시 음식점 확대 조치에 따른 감시활동을 추진한다(돼지고기·쇠고기·닭고기·쌀·김치류의 원산지 표시 기준 음식점을 기존 300㎡(음식점 수의 3% 범위)에서 100㎡으로 확대).

7) 지속 가능한 국민농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농업·농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여론 형성과 다양한 국민행동의 조직화

오늘 위기에 처한 농업·농촌문제의 해결과제는 산적해 있다. 그동안 관련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실상 농민만이 고군분투해 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 농업문제는 이제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 전체의 지속 가능한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직결된 문제이다. 따라서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의 국민 홍보와 국민 행동을 조직하여 문제의 범국민적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이다. 국민의 이해와 지지, 성원과 응원을 구하는 홍보와 여론 형성, 그리고 다양한 국민행동을 조직해나간다.

8) 국제식량농업다양성협약 체결운동 등 국제연대 활동

식량주권과 농업다양성에 관한 국제협약체결운동이란 WTO체제아래 추진되는 초국적 자본 중심의 세계화나 시장통합이 다양하게 공

존하던 각국의 고유한 농업과 식문화를 심각히 파괴하고 식량주권을 침해하는 등 인류의 식량 농업체계가 처한 위기상황을 기초로 천부불가침의 식량주권과 농업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지침을 포함하는 국제협약'을 체결 하자는 것이다(예, 문화다양성에 관한 국제협약). 이를 위한 국내외 운동을 조직하고 확대하자는 것이다.

4. 마치며 : 국민농업운동의 조직화

주지하다시피 농업·농촌을 둘러싼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농업·농촌에 대한 21세기 한국 사회의 과제를 실현해나가는 데 있어 농민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농업·농촌의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농업·농촌의 문제가 국민 전체의 문제임을 주지시키며 그 과제 해결에 국민 전체의 지지와 응원, 참여와 공동행동을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단기적 개별적 일과적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 조직적 지속적 대응을 담당하는, 문제 인식과 과제 해결에의 공동네트워크를 형성 촉진하는 도·농간 연대조직체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농업계 내부의 토론을 활성화하고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 조율을 도모하며, 농업계와 비농업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이러한 내부 토론과 소통을 통해 농업·농촌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확산과 적절한 수준의 실천 방안을 도출하여 추진한다.

국민 각계각층이 참여한 광범위한 도·농 연대 조직체는 ▶ 우선은 농촌과 도시 각 부문의 여론 주도층 주요활동가들을 기본 성원으로 하는 네트워크형 조직으로 출발하여 점차 시민 참여형 운동으로 발전 ▶ 조성되는 정세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의제를 개발 공론화해 나가는 상설 조직으로 발전 ▶ 농촌과 도시 각

부문·지역의 주요 활동가들(및 조직들) 간의 상생협력 사업과 공동행동을 협의하고 인식을 공유해나감에 연대의식과 연대활동을 촉진시켜가는 연대 조직으로 발전을 목표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같은 취지와 목적으로 결성되어 있는 국민농업포럼을 국민농업운동 조직체로 발전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한 앞서 소개한 도농생활협동운동, 학교급식운동, 지역먹을거리운동, 지역 에너지운동, 도시농업운동, 식생활교육운동 등 이미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주체들 간의 우선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상호 협력·보완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농업운동을 전개하는 활동지향으로는 첫째, 앞으로 농업·농촌의 문제가 단지 특정 부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의 존립방식의 문제이며, 국민의 생활 방식 그 자체와 관련 있는 문제라는 점이다. 따라서 모든 분야·계층의 사람들에 의한 범국민적 참여의 조직화가 불가피하다. 둘째, 경제적·농학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농업·농촌의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짚어보고, 문명론적 차원(농적 문명, 농적 가치)에서 그리고 우리 국민의 생활양식과 가치관 등 근본적 차원에서도 접근되어야 한다. 셋째,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농업·농촌이 존재해 나갈 앞으로의 모습과 그 역할 및 가치에 대하여 정립해나가야 한다. 넷째, 나아가 21세기 지속 가능한 한국의 사회경제 구조 속에서 농업·농촌에 요구되는 다원적 기능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조사연구를 통해 적절한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역할과 가치의 유지·증진을 위해 국민적 합의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㉞